

광주·전남 '역대급 물난리' 인재(人災)로 드러나

도로 공사 중이던 야산서 산사태 5명 사망...경찰 관련성 수사
나주 문평천 일대 농지 808ha 침수...“죽산보가 물 흐름 저해”
광주 서창 배수문 안 닫혀 ‘농약 섞여 바다’로... “행정당국 탓”
집중호우 변화 양상에 맞춰 수해 예방·대응 기준 재정비 필요

기록적인 ‘물 폭탄’이 쏟아진 광주·전남에서 발생한 산사태·하천 범람·침수 등 막대한 피해가 일어난 재난행정이 낳은 인재(人災)라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광주시·전남도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8시29분께 곡성군 오산면 성덕마을 뒤편의 야산의 토사가 무너져 내리면서 주택 5채를 덮쳐 주민 5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산사태 피해 주민들은 “산사태가 발생하기 앞서 야산 중턱의 국도 15호선 도로 확장 공사 현장에서 발파 작업이 수차례 있었다”며 공사와 산사태 간 관련성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산사태가 시작된 지점이 도로 확장공사 현장과 이어져 있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따라 경찰이 국도15호선 확장공사가 산사태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확장 공사와 산사태 사이의 인과 관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호우에 앞서 피해 예방을 위한 안전 조치 등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가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다.

1989년 이후 30여 년만에 유례를 찾기 힘든 대홍수로 피해를 입은 나주 다시면 일대도 보·제방 관리 및 보완 부실이 피해가 커진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지난 8일 오전부터 폭우로 죽산보 인근 문평천 제방이 범람 위기에 몰렸고, 오후 3시30분께 문평천·봉황천 제방이 잇따라 무너지며 북암·가흥·죽산리 일대 농경

지 808ha가 침수됐다. 지난 7일부터 이틀간 누적 강수량이 최대 390mm에 달해 ‘어쩔 도리 없는 천재지변’이라는 시각도 있지만, 상당수의 농민들은 ‘영산강변 보·제방·수로 등이 화를 키웠다’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죽산보의 물 흐름 장애’와 ‘문평천 둑 높이기 사업 좌절’ 등으로 강 범람 뒤 역류한 물이 곧바로 민가를 덮쳤고, 수해 이후 물 빠짐도 원활치 않다는 것이 농민들의 주장 요지다.

다시면 죽산리가 고향인 이종행씨는 “죽산보가 강물 흐름을 가로 막아 수위가 5m 이상 높아졌고, 문평천에서 내려오는 물이 흐르지 못하다 영산강물이 문평천으로 역류한 것은 인재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죽산리 죽지마을 주민 이진창씨도 “4대 강사업 당시 죽산보를 축조하고 소하천 제방을 쌓을 때 독·제방의 규모 차이에 따른 한계 수위를 제대로 감안하지 않았다”며 동조했다.

실제 농민들은 ‘문평천 제방의 폭이 좁고 독 높이가 낮다’며, 제방 보강을 수 차례 건의하기도 했다.

또 다른 주민은 “거둬던 건에도 정부는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제방을 사실상 방치하더니 결국 터지고 말았다”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도 좋으니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달라”고 호소했다.

영산강변과 인접한 광주 서구 서창동 일

대 침수 사태도 배수문 운영·관리를 둘러싼 허술한 대응이 원인으로 꼽힌다.

지난 8일 오전 7시부터 광주 서구 서창·마북·벽진동 송정방수제 인근 일대가 인근 영산강에서 역류한 물에 잠겼다. 주택 50여 채가 침수 피해를 입었고 이재민 60여 명이 발생했다.

특히 서창농협·영농지원센터 등도 침수돼 보관 중이던 농약과 농자재가 범람한 강물과 섞여 행정당국이 이날까지 사흘째 긴급 방제·배수 작업을 벌이고 있다.

서창동 일대는 영산강보다 저지대로, 인근 강변에는 재해 예방 목적의 제방 배수통문 2개가 설치돼 있다. 배수통문은 강물이 불어나 역류할 우려가 클 때 폐쇄, 강물의 마을 유입을 막는 기능을 한다.

그러나 배수문 운영을 맡은 서구청이 당일 뒤늦게 폐쇄를 시도했으나 닫히지 않았다. 인력으로 배수문을 닫으려 했으나 실패해 막대한 강물이 유입, 침수 피해를 키웠다.

서구가 관리주체인 익산국토관리청 광주국토관리사무소에 협조를 요청했다. 하지만 오후 2시에야 실무자가 현장에 도착, 비상 장비를 동원해 수문을 곧바로 폐쇄했다.

그 사이 서창동 일대는 이미 ‘농약 등이 뒤섞여 악취가 나는 물바다’로 변했다.

주민들은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하면서 강물이 막 유입되던 새벽시간대에 미리 배수문을 닫지 않아 화를 키웠다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발빠르게 배수문을 조작하지 않은 운영 주체와 정작 필요한 순간에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설비를 방치한 관리주체 모두 ‘사실상 손을 놔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서창동 주민 강모(66)씨는 “강변과 가까운 농협 건물이 침수될 때만이라도 배수문을 제대로 닫았으면 추가 침수는 막을 수 있었다”며 “관계 공무원들이 발빠르게 대처하지 못해 안타깝다”고 밝혔다.



8일 오전 전남 곡성군 오산면 성덕마을 산사태 사고 현장에서 소방당국 등이 토사에 매몰된 실종자 구조작업을 하고 있다. 전날 오후 8시29분께 마을 뒷편의 야산에서 흘러내린 토사가 4가구를 덮쳐 3명이 숨졌으며 2명이 매몰돼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8일 광주 서구 서창동 영산강변 내 서창농협 영농지원센터 일대가 폭우로 불어난 강물에 침수됐다. 행정당국은 유실된 농자재·농약에서 나온 유해성분이 강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고자 방제·배수 작업을 펼치고 있다. (사진=독자 제공)

기상관측 사상 유례없는 ‘물 폭탄’이 이어지지만, 산간 지역 산사태 예방 시설과 강·하천 제방 및 배수 설비를 근본적으로 정비했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기동취재본부

광주·전남 특별재난지역 선포되나...피해금액 ‘눈덩이’

광주 공공·사유 피해액 500억 원 초과할 듯
나주·구례·곡성·담양·장성·영광·화순 피해 커

지난 7~8일 이틀 간 광주·전남에 500mm 안팎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막대한 재산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특별재난지역 선포 심사를 위해 현지 조사에 착수했다.

10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행정안

전부 수해 사전피해조사단이 이날부터 이틀 간 일정으로 수해 피해지역에서 조사에 착수했다.

광주는 1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으며, 공공시설 841건 381억원, 사유시설 601건 119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공공시설은 도로침수 및 파손 669개소 80만㎡에 86억원, 황룡강·평동천·석곡천 범람에 따른 농로유실 13개소 16억원,

농업기반시설 및 하천제방 유실 5개소 240억원, 석축·옹벽유실 97건 39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유시설은 주택 및 양동시장 등 상가침수 497건 10억원, 산사태 등 급경사지 유실 1건 10억원, 농경지 1853ha(광주 전체 농경지의 32%) 침수 9억6000만원, 비닐하우스 1124ha(전체 하우스 15%) 침수 89억4000만원 등이다.

여기에 기아타이어, 테크노파크, 평동공단 등 공장 3개소도 침수돼 피해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지난 9일 호우피해 점검을 위해 전남을 찾은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나주와 구례, 곡성, 담양, 장성, 영광, 화순 등 7개 시·군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했다.

나주는 피해규모가 75억원 이상, 구례·곡성·담양·장성·영광·화순은 60억원 이상이면 지정될 수 있다. 전남지역은 제방 붕괴에 따른 농경지 침수와 축사 붕괴 및

기초 매몰, 주택 침수, 도로 파손 등 공공과 사유시설에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피해 산정에는 도로와 제방 등 공공시설과 주택, 하우스, 축산시설 등 사유시설이 포함된다. 논밭은 유실되거나 매몰될 경우 우만 인정한다.

사전 조사단의 결과를 토대로 중앙피해합동조사단의 정밀조사 이후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를 결정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한다.

지금은 모두가 어려운 때입니다. 노사민정이 손을 잡고 코로나19를 함께 이겨냅시다.

이겨내자
코로나

- 기업은 고용유지에 힘쓰고
- 근로자는 생산성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 정부는 일자리 안정에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고용불안·노사갈등 노동문제로 애로가 있는 개인이나 기업 노동조합등
누구든 신청하시면 직접 방문하여 갈등해소를 위한 중재를 해드립니다.

☎ 신청 및 상담전화 062) 524-9666

전라남도노사민정협의회 · 전라남도 노사갈등조정해결실무위원회